

“경제 활력위한 투자 확대… 신뢰·정직 기본, 고객 최우선”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4대 금융그룹 CEO 핵심키워드

4대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의 경영 핵심 키워드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고객의 시간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인공지능(AI)이 금융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시기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자는 의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을 첫 과제로 꼽았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린 금융자금을 혁신 기업, 첨단 산업, 벤처,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생산적 금융 전환…리스크 관리

KB금융은 향후 5년간 총 93조원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성장펀드 연 10조원 공급, 그룹 자체 투자 15조원 등으로 미래 산업 생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통
우리금융그룹 회장

KB 양종희 “신뢰는 실력에서 나와”

신한 진옥동 “혁신기업과 동반성장”

하나 함영주 “변화 제대로 측정해야”

우리 임종통 “기업 성장 폭넓게 지원”

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머니무브(Money Move)로 흔들리는 우리의 이익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는 자문과 상담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 부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93조~98조원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향후 그룹의 성장은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들의 동반 성장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84조원, 우리금융은 72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지원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날의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며 “머니무브와 함께 자산관리 역량 확보와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I 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통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에 대한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투자 용자로 폭넓게 지원해 생산적 금융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강점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객과의 신뢰…그룹 가치 결정

4대금융 회장은 고객과 쌓아올린 신뢰와 변화의 깊이가 금융그룹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신뢰는 실력에서 나온다”며 “KB의 모든 임직원은 부정할 일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 정보와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KB에 가면 가장 앞선 AI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과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대를 이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사회로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 늘 신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고객에게 ‘신하는 역시 다르다’는 자부심을 드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지 봐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근절, 보이스코싱 선제적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개혁 수준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종통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인으로서 신뢰와 정직을 기본으로 하고 고객을 최우선에 두는 철저한 자세가 이제 우리금융의 진짜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쌓아올린 신뢰와 변화의 깊이가 우리금융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독립성 vs 민주적 통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 ‘촉각’

지정땀 운영전반 재정부 관리·감독 “정해진 방향 없지만 이달 중 결정”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피감기관(금융회사)에서 분담금을 각출해 운영돼 왔다. 만약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시 정부, 즉 재정경제부(舊기획재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한국은행과 같은 독립성 보장이나, 아니면 각 부처 산하기관처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가의 기로에 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책임·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후보군 중 특히 금감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매해 2월1일 이전에 공공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일부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해제는 회계 연도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금융시장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 검사가 부신했거나 감독에 실패했다는 논란이 종종 불거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이

나 결론은 없는 상태다. 정기 지정 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지정 요건과 정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실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검토를 비롯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편성, 경영평가, 임원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재경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놓인다. 이 경우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

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공적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금융감독기능은 금융위원회(정부)와 금감원(독립기구)이 이원화 체제로 함께 맡고 있다. 금융위는 종전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바뀐 명칭이다.

당·정은 지난해 9월 금융 ‘위’를 기재부(현 재경부)와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화한 바 있다. 다만 금감 ‘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철화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丙午年

2026년에도 유한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정진하겠습니다.

Progress & Integrity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SINCE 1926

